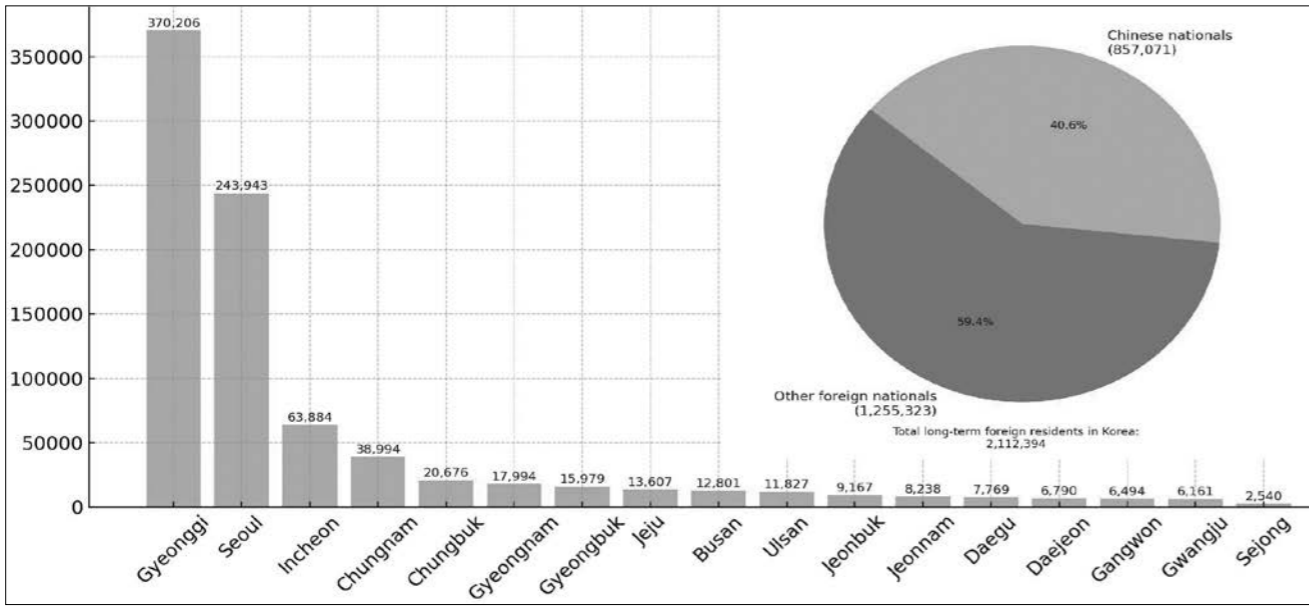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 국제범죄 제보자 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인상



한국 법무부의 지난 6월말 기준 재한 중국인 분포 통계수치

한국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말 기준,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11만 2,394명에 달하며 그중에서 약 85만 7,071명이 중국 국적자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재한 중국인 커뮤니티는 경기도(약 37만명), 서울특별시(약 24만명), 인천광역시(약 6만명)에만 약 6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체류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불법도박 등 조직범죄는 외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외국인을 범죄 수행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탓에 외국인 피해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검거 보상금'의 최고한도를 최대 5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259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것이다.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51만 8,000원)에서 5억원(한화)으로 올랐고 50키로그램 이상 암수 마약 조직 검거보상금도 기존 최대 2천만원(한화, 인민페로 약 10만 3,600원)에서 5억원(한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도 검거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개정된 <규정>은 보이스피싱, 마약, 테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검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와 액수가 심사되며 지급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신고의 신속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로가 입증된 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

다. 즉 재한 외국인 역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보나 검거 협조를 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같은 외국인 사회 내부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범인 검거의 핵심 단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상금 지급 조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범인검거' 또는 '테러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범죄의 범행형과 사회적 중대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는 최대 500만원(한화, 인민페로 약 2만 5,900원)까지,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는 최대 300만원(한화, 인민페로 약 1만 5,540원)까지 일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여기에 특별검거보상금으로 최대 수억원(한화)까지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된 공무원, 허위신고자, 이미 언론 등에 보

도된 사건에 대한 신고자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재한 외국인은 사건을 처리한 국내 경찰관서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공로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며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경찰은 사건 담당 부서의 의견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

범죄와의 전쟁

이번 보상금 제도의 강화는 단순한 제보장려 차원을 넘어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 치안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 속에 놓인 재한 외국인에게도 범죄 신고와 공익 제보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마약, 조직범죄 등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 차단 및 검거 체계를 대폭 강화해왔다. 검거보상금제도의 확대는 이러한 한국 현 정부 기조의 일환이며 외국인 포함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이다.

범죄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맞서고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연길 민속원 근처 6명 '호객군' 행정처벌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중국조선족민속원 근처에서 관광객을 무리하게 유인하거나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호객군(小蜜蜂)'들에 행정구류와 벌금 처벌을 내렸다.

6월 18일, 연길시공안국 건강파출소 경찰은 순찰중 민속원 주변에서 관광객을 유도하거나 가로채 근처에서 '호객군'들이 도로 중앙까지 나와 관광객을 끌어가거나 등 공공질서와 도시 관광 형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방문조사중에도 일부 상가들이 '호객군'들을 고용해 무리하게 관광객을 끌어가거나 가격 경쟁을 벌인다."는 반응을 들었는지라 이는 정상적인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해 봉사 질이 떨어져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공파출소는 혼란을 바로잡고 관광객과 시민, 상인들에게 원활하고 안전하며 질서있는 관광 및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호객군'들이 중국조선족민속원 주변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은 즉시 조를 나누어 수사작업을 펼쳤으며 약 한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

국 모든 관련자의 상황을 파악했다.

7월 17일, 사건에 연루된 6명 '호객군'은 전부 연길시공안국 집행사건처리중심으로 소환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련 사업업군들의 법에 따른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속원 주변에서 계속 관광객을 유도하거나 가로채 근처에서 주차된 차량에 태운 뒤 특정한 사진관으로 안내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관광객이 요금을 지불할 때마다 그에 따라 '분배금'을 챙긴 사실도 시인했다.

7월 19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 23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이들 6명에게 공공장소 질서 문란행위로 각각 행정구류 7일, 행정구류 7일과 벌금 200원, 벌금 200원, 벌금 100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경찰은 "모두가 함께 관광 환경과 형상을 수호해야만 연길시의 관광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상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쟁해야 하며 관광객과 시민의 출생 및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니바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엄벌에 처하게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오건기자



음란카드, 그 배후에는 더 큰 함정이



16일 새벽 1시경, 매하신구(매하구시) 공안국 광명파출소는 장안성주택단지 부근에서 음란카드가 배포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범행행각을 저지르고 있는 장모를 체포하고 이어 신성화원 부근에서 리모 등 다른 2명의 범죄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다.

체포된 범죄용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7월 10일에 사평시에서 매하구시로 이동하여 매일 새벽 거리와 주차장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카드를 붙여왔는데 카드 1장당 0.8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범죄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 해외에 있는 웃선에 보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추가 수사중에 있는바 이들은 법의 엄중한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측에 따르면 이른바 도색(桃色)카드라 불리는 음란카드는 사실상 사기조직의 유인 수단이다. 그들은 먼저 저속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 관련 앱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불법주문(刷单返利)과 인터넷 도박, 채팅 협박 등 방식으로 정밀한 사기범죄를 저지른다. 일단 카드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사기꾼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에 빠져 재산 손실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수법 분석

온라인 사기의 피해자는 주로 남성인바 불법분자들은 '무로 만남'이라는 명목으로 유인해 서서히 함정에 빠지게 한다.

수법 1: '음란 + 불법주문'

불법분자들은 '임무 완료 시 무료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충전을 유도한다.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소액의 반환 수익을 주고 피해자가 큰 금액을 충전한 후에는 '시스템 고장'과 '조작 실수' 등의 핑계를 둘러대며 계속 돈을 투자하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한다.

수법 2: '음란 + 인터넷 도박'

불법분자들은 '적중 시 100% 수

익, 무료 미녀 서비스' 등의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는다. 그 후 배후 조작으로 승률을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약간의 이익을 주며 피해자가 큰 금액을 투자한 후에는 저들이 모든 돈을 가져간다.

수법 3: '음란 + 화상통화'

불법분자들은 먼저 불법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주소록 정보를 손에 넣은 후 화상로 영상 채팅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걸려들면 이를 틈타 화면을 확대하고 결국 부적절한 영상으로 사기를 친다. 다수의 피해자는 체면 때문에 계속해서 송금할 수밖에 없다.

범행 수단 특징

1. 불법분자들은 QQ로 카드 붙이기 임무를 받고 QR 코드가 없는 전자카드를 출력해 거리에 붙이며 QR 코드는 음란물로 유혹하는 허위 투자나 불법주문 사기 앱으로 연결된다.

2. 음란카드를 조직 및 배포하는 불법분자들은 QQ, 텔레그램(飞机) 등을 통해 소통한다. 상급자는 그룹 내에 배포할 카드 이미지와 작업 목표를 공유하며 현장 배포원들의 일일 작업 현황을 점검한다.

3. 불법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차량 운전과 도보 또는 공유자전거를 타고 여러 거리의 주차장과 주차구역의 차량 유리에 음란카드를 붙이며 대부분 지역을 넘나드는 도주 범행을 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작은 리익에 유혹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대중들에게 귀띔했다. 동시에 법률 의식을 제고하여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QR 코드를 스캔하지 말며 송금하지 말고 강조했다. 또한 누군가가 음란카드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110에 신고할 것을 호소했다.

/글 오건기자

/사진 매하신구

공안국



명의만 빌려준 법인대표, 200만원 빚더미에

"법인대표를 안하랴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줄 수 없어요."

리녀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었다. 전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2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명의만 빌려줬다가...

리녀사에 따르면 복경의 한 회사 재직 당시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장모(張某)가 그녀와 '친분이 좋다'는 리유로 법인대표 겸 유일한 주주를 맡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사회보험료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식이 부족했던 리녀사는 결국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장모가 회사의 명의를 리용해 큰 액수의 돈을 빌리면서 회사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던 2024년, 한 채권자가 리녀사와 회사, 장모를 함께 무한시 흥산구인민법원에 고소하여 2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산 동결 조치를 신청했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빚과 재산 동결 조치로 리녀사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리녀사는 "단 한번도 회사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재산 동결 조치'로 인해 가정의 기본적 생활 지출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리녀사는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제공하며 자신과 회사 재산은 분리되어있음을 증명했고 이 사건이 형사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제출했다.

담당 법관이 신속히 복경시공안국 모 부근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장모는 계약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금되어있었고 이 사건의 채권자도 이미 해당 부근에 신고한 상

태였다.

해당 사건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처리가 필요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를 만나 리녀사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대표'일 뿐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빚에 대한 사실도 모르며 오로지 장모의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실제 상황을 설명하며 리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채권자에게 전달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리녀사에 대한 소송과 재산 동결 신청을 취소했다. 법원은 즉시 법에 따라 리녀사 계좌에 대한 재산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별 주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법률 의식이 부족한 관계로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주주나 법인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단 회사에 빚 관련 분규가 생겼을 경우,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주나 법인대표로서 상응한 책임을 지야 한다.

심지어 '명의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더라도 대외관계에서는 여전히 큰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짜로 창업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주주나 법인대표 등의 신분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권리를 지킬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제 5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담당 기구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담당 기구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

험료를 정한다. 고용업체와 근로자는 모두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바 이는 법적 의무이다. 일부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만약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1. 채용단위가 법대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 담당 기구에 감사를 신청해야 하며 사회보험 담당 기구는 채용단위에 추가 납부를 명령한다.
2. 감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의 비용을 보충 납부한 후 로동중재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근년간 돈화구기중법원에서는 다원화 분쟁 해결 체계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서 순회재판과 법률보급선전 등 방식을 통해 법치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도록 추진했다. 최근, 그들은 새시대 '풍교경합'을 깊이있게 실천, 법정을 대중들의 '집안'으로 옮겨 경각지 사용권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몇시간 동안의 인내심 있고 세심한 소통과 조정을 거쳐 피고는 분쟁 중에 있는 일부 토지의 사용권을 반환하고 원고에게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동의했다. 원고 또한 양해 의사를 밝히고 다른 소송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길림일보